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2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전반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2018년 2월 주요 조사결과

01

현안조사 1: 평창올림픽과 대북인식

- 평창올림픽→대북특사 방북→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응답자의 57%는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동시입장, 북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한 긍정응답도 50%를 상회합니다. 그렇지만, 이념성향이나 연령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연령별 대북인식은 중간 연령대인 40대가 가장 진보적이고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이른바 역U자 패턴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살펴야 할 점이라 할 것입니다.
- 올림픽 개최 전에 논란이 컸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잘했다(45%)는 응답과 잘못했다(46%)는 응답이 팽팽합니다. 올림픽 전에 비해 긍정응답이 상승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합니다. 한국리서치는 이를 공정성 측면과 남북 단일민족 인식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 국민은 한반도 정세와 현상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평창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호전(100점 만점에 15.7점에서 33.5점)되었고, 북한에 대해 제재(38%)보다는 대화(62%)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78%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65%는 올림픽 후에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평화 및 북핵 해결을 위해 협력할 나라로 미국(44%)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북한(34%)입니다.
- 향후 남북대화국면에서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안조사 2: 교육

- 새학기를 맞이하여 교육 분야 관심사와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학교 통폐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이지만, 반대한다(29%)와 모르겠다(17%)는 응답도 적지 않습니다. 연령별 입장이 다소 상이합니다. 통폐합 문제가 당면현안인 중소도시와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대도시 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볼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격, 교권,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 존중 정도,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한 긍정평가 모두 과반에 못 미칩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원로 분께서 인권이나 교권에 대한 권리 주장에 앞서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겨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이라는 응답(61%)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해당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높아 29세 이하는 관련 응답이 72%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안전(12%), 게임중독(8%), 저소득 청소년 복지 지원(8%), 학교 밖 청소년 지원(5%), 청소년 자살(4%) 등의 순입니다.
-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선제 선출 선호 응답이 64%로 높습니다. 29세 이하는 80%가 직선제를 선호합니다. 교육감 선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 학생 인성교육(40%),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 해결 능력(21%), 학생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16%) 등을 많이 꼽았습니다.
-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응답(46%)이 진학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38%)보다 높지만, 해당 응답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29세 이하는 38%만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전월(66%)에 비해 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10% 하락세에서 반등하였습니다. 30대이하, 수도권, 중도와 보수에서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큼니다. 리더십 평가 항목 중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는 응답이 전달에 비해 3% 상승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 대응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4% 하락하였습니다. 예의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 경제인식 지수가 전달 -23에서 -26으로 악화된 점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14에서 -4로 호전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가와 인식이 냉철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2018년 2월 기획조사 보고서는 3월 중순 이후 발간 예정입니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1

현안조사

01

현안조사

1. 평창 모멘텀과 대북인식의 변화

**남북대화국면
평창전후 여론 변화
이해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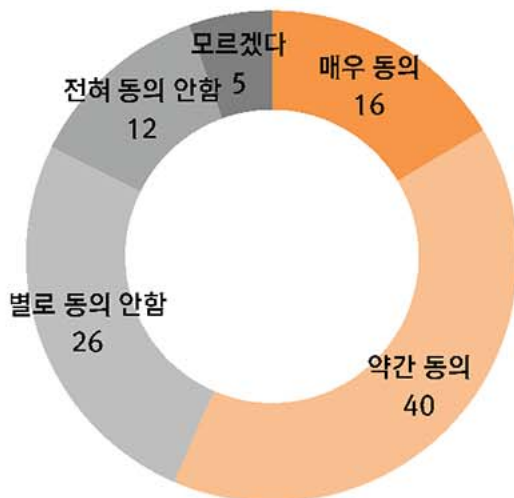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국면은 대북특사 방북에 이어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여론 변화도 예상된다. 평창올림픽 전후에 나타난 국민여론의 변화와 연속성은 향후 정국 변화과정에 국민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며 움직일지,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한다. 이번 호에서는 평창 전후 안보의식 변화를 꼼꼼히 살펴본다.

**평창올림픽 평가
“긴장완화에 기여” 57%
진보-보수 온도차이는 여전**

우선, 지난 2월 25일 폐막한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진술에 57%가 동의(매우 동의 16%, 약간 동의 40%)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별로 동의 안 함 26%, 전혀 동의 안 함 12%)에 그쳤다. 이념성향 별로 시각 차이는 분명했다. 진보 층에서는 77%, 중도 층에서 54%가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1%만 공감하였다.

Q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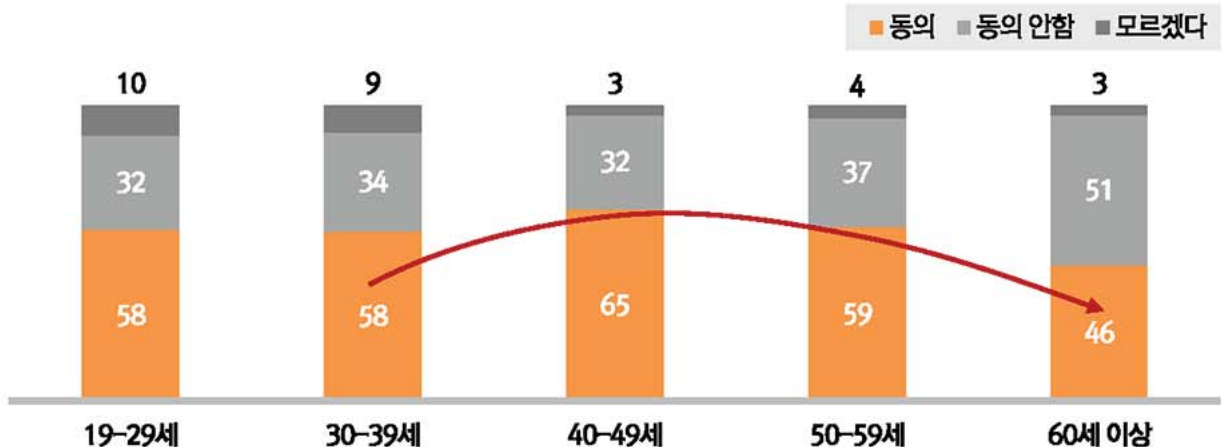
이념성향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①+② 동의 안함	③ 약간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12	26	38	40	16	57	5	100
진보(0-4)	(321)	5	15	19	44	33	78	3	100
중도(5)	(340)	10	30	40	44	9	54	7	100
보수(6-10)	(294)	22	34	55	33	8	41	3	100

**세대별 대북인식
역U자 패턴 일반화
40대 65% 가장 긍정적
2030 58%, 50대 59%,
60대 이상 46%로 냉담**

세대별로 보면 평창올림픽의 긴장 완화효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40대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에서 59%, 20대와 30대에서 58%로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에 그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과반을 넘었다. 대북안보 이슈의 경우 5060세대와 함께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40대가 가장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세대별 이념성향의 역U자 패턴은 2010년 경 이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Q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지역별 편차
호남대영남
온도차 뚜렷**

지역별로도 평창올림픽의 안보 효과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호남지역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69%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각각 53%, 46%로 평균 수준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 뚜렷한 인식 격차가 확인되는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들이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Q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①+② 동의 안함	③ 약간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12	26	38	40	16	57	5	100
거주지역									
서울	(195)	11	25	35	44	14	58	7	100
인천/경기	(300)	10	25	35	38	20	59	6	100
대전/세종/충청	(105)	8	31	39	41	16	57	4	100
광주/전라	(102)	8	20	28	48	21	69	3	100
대구/경북	(102)	13	29	42	42	10	53	5	100
부산/울산/경남	(155)	23	25	48	33	13	46	6	100
강원/제주	(41)	10	31	42	38	15	53	5	100

평창 모멘텀

동시입장,

김여정 대표단방한,

한반도기사용도

긍정평가우세

평창 올림픽 기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부가 추진한 남북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좋았다는 평가가 못했다는 평가보다 우세했다. '개폐회식 동시입장'은 65%, '북한응원단' 및 '문화예술단 방한'에는 각각 62%,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 방한'에 대해서도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란이 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55%가 좋았다고 평가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Q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과 동시입장, 북한의 고위 대표단과 문화예술 단들이 방한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 잘함 ■ 모름 ■ 잘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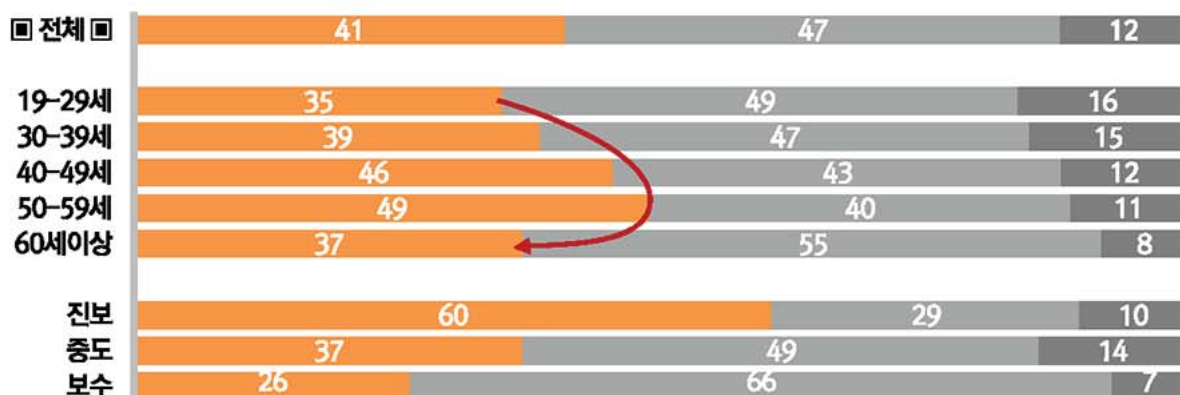
단일팀 논란은 여전
향후 단일팀 확대
찬41%대 반47% 팽팽,
냉담한 2030과
중도층=60대와 비슷

다만 정부의 사과까지 초래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좋았다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는 응답이 46%로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향후 다른 국제대회에 "단일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 41%, "동의하지 않는 편"이 47%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앞서고 있다. 진보층에서 찬성 60%, 보수층에서 반대 66%로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운데, 중도나 진보성향이 강한 2030세대가 60대만큼이나 단일팀 확대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주목된다.

Q 앞으로 다른 종목의 국제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 동의하는 편이다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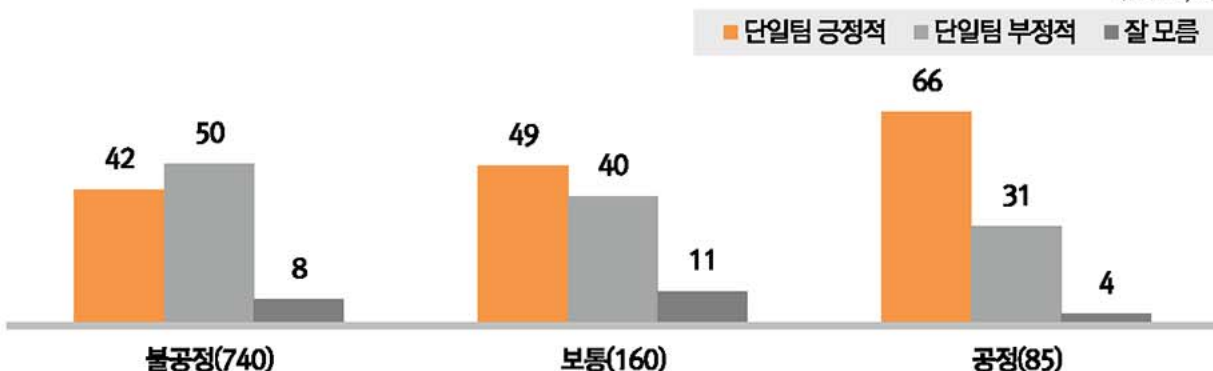
단일팀 거부감 요인1

- 법/절차따라 선발된 선수가
파해
- 법/제도 집행에 대한 불만과
단일팀 태도 간 상관관계
엿보여

다른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에 비해 유독 단일팀 구성에 대한 비판여론을 자극한 요인이 무엇일까? 당시 정해진 절차와 룰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어 수년간 대표팀 활동을 준비해온 선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일팀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컸다. 즉 제도와 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법(제도) 집행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집단(740명) 중에서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5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층(160명)에서는 40%, 공정하다는 응답자(85명)중에서는 해당 응답이 3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앞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Q 법 공정성에 대한 태도 별 평균 단일팀에 대한 평가

(N=9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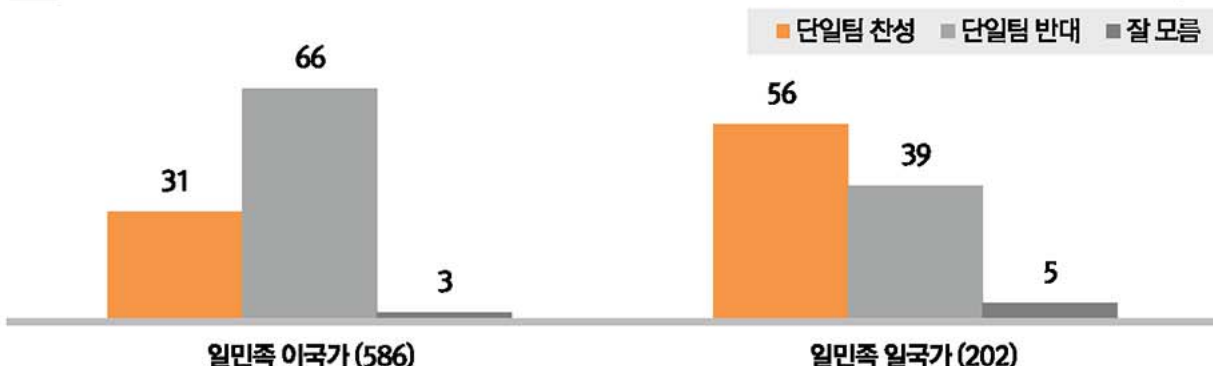
**단일팀 거부감 요인2**

- 남북을 별개국가로 보는
분리주의
- 북한과 단일팀 구성의
정당화 쉽지 않아

최근 한국사회에서 남북 분단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별개의 민족국가로 보는 분리주의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주1)} 단일팀 구성은 같은 공동체임을 전제한 목표인데, 그 전제가 흔들리면 단일팀 구성의 정당화도 어려울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실시한 민족화해범국민협력협의회(민화협)와 한국리서치의 조사(800명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이다(일민족 이국가)”라는 분리주의적 태도가 강한 응답자(586명) 중에서 단일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66%나 되었지만, “같은 민족이자 같은 국가”라고 답한 통합적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202명) 중에서는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대비된다.

Q 남북 국가정체성에 대한 태도 별 단일팀에 대한 찬반 여론

(N=788, %)



주1) 자세한 내용은 정한울, 2017,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 Two States 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평화연구」 제25권 2호, 43-86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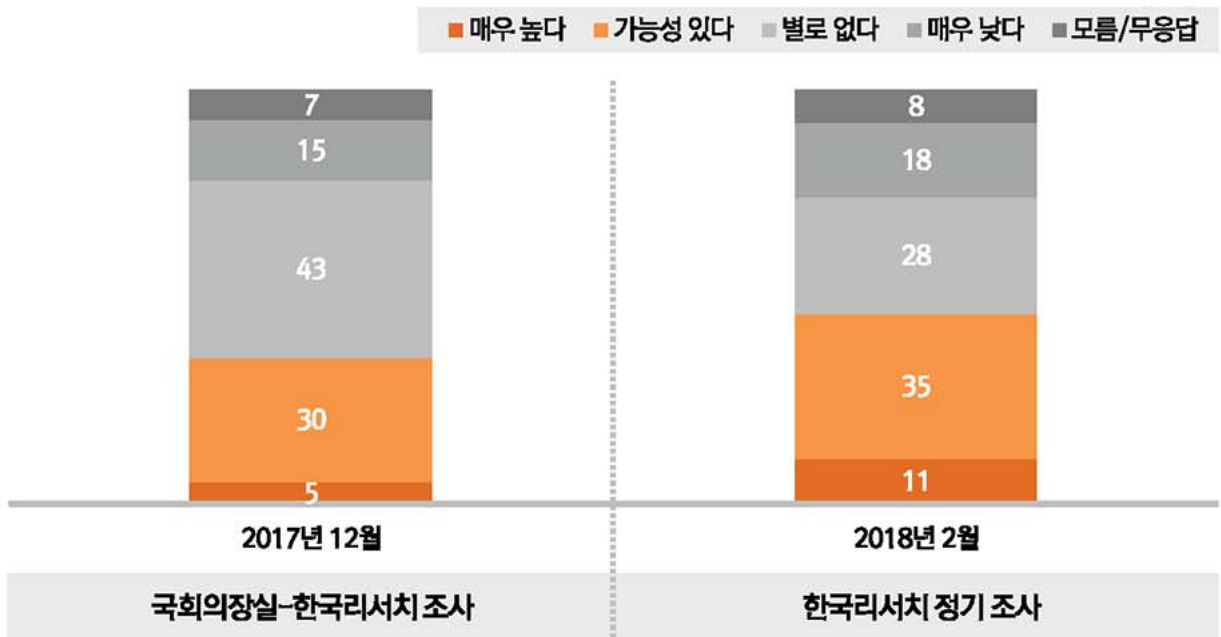
평창이 남긴 명과 암

- “제재보다 대화” 62%
-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기대감 상승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작년 12월 28일 평창 올림픽 전 국회의장실-SBS 기획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57%가 부정적(별로 가능성 없다+매우 낮다)이었으나,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제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정부의 대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4월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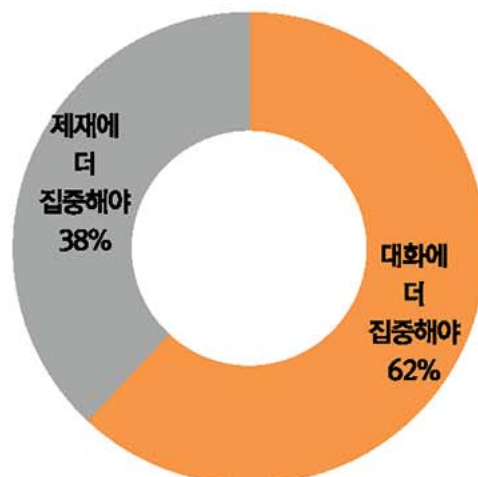
Q 문 대통령의 “한반도운전자론”의 실현 가능성

(N=1,000, %)



Q 현 시점에서의 정부의 대북한 정책 방향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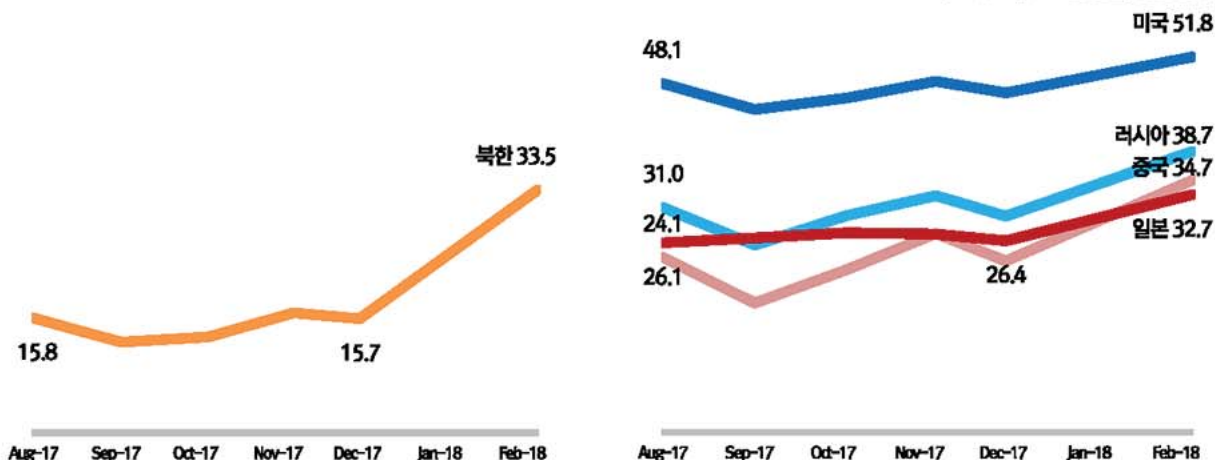
북한 호감도 급상승

- 평창전 15.7→후 33.5
- 미국 호감도 51.8로 가장 우호적

여론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평창 전후 한반도 주변국(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한 100점 만점 호감도 변화를 보면, 북한은 평창 올림픽 직전인 12월 정기조사에서는 15.7점에 불과하여 일본(26.4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33.5점으로 상승하면서 러시아(38.7), 중국(34.7), 일본(32.7)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Q 주변국에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N=1,000, 100점 만점,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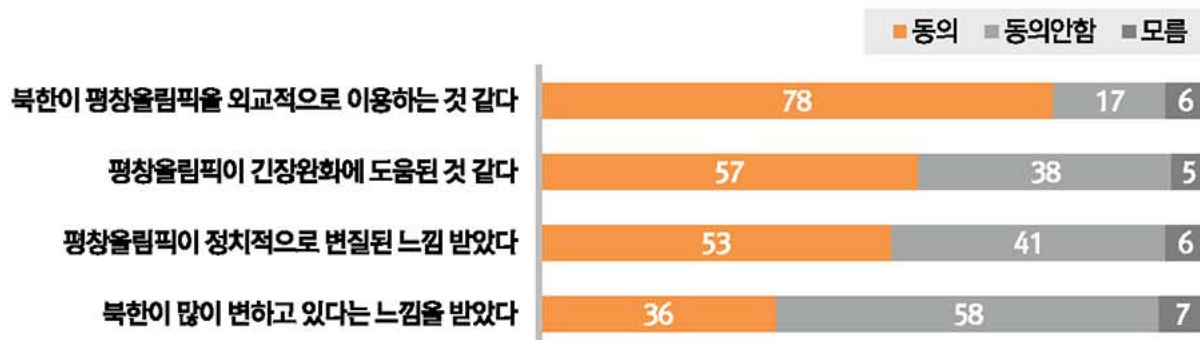
**평창올림픽의 양면성**

-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이용” 78%
-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느낌” 53%
- “북한의 변화, 체감된다”는 의견은 36%에 그쳐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왔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남북의 대화 국면과 긴장완화 효과를 체감(57%)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78%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평창올림픽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5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3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북한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향후 남북대화 정국에서 정부가 염두에 둘 대목들이다.

Q 이번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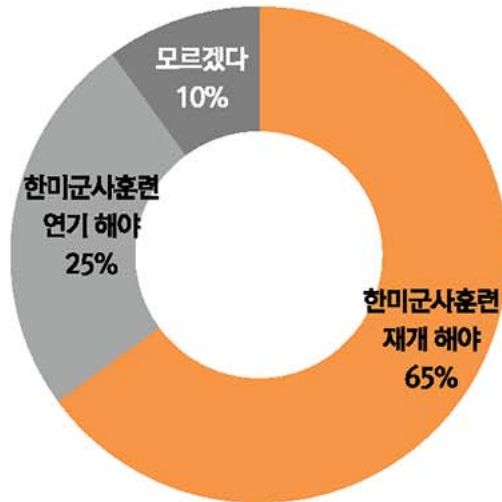
올림픽 후 한미훈련

- “훈련 재개해야” 65%
- “진보층 54%도 찬성”,
- 북핵 해결의 협력 대상
“미국 44% > 북한 33% >
중국 11% 순”

평창 올림픽의 성과 이면에 남아 있는 북한에 대한 우려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8점으로 북한 호감도 점수가 평창올림픽 전후로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단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북대화 일정과 별도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65%였고, “남북대화 국면이 유지되면 계속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25%에 불과했다. 진보층에서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54%). 한편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대상”에 대한 질문에 미국 44%, 북한 34%, 중국 11% 순으로 나타났다.

Q 올림픽 이후 한미군사훈련

(N=1,000, %)

**Q 평화 및 북핵 해결 위해 협력할 나라**

(N=1,000, %)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01

현안조사
2. 교육 현안

학교 통폐합
찬성비율 과반 넘으나,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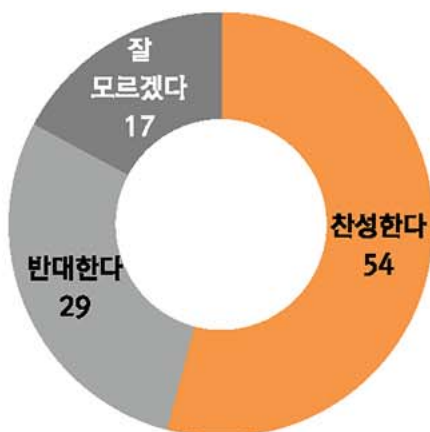
학교통폐합에 대해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29%, 잘 모르겠다 17%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인 가운데, 찬성 응답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49%)가 일반인들(55%)에 비해 더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통폐합 찬성 응답이 높으며, 해당 응답은 고연령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지역규모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Q 귀하께서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명)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54	29	17	100
학부모 여부					
학부모	(199)	49	32	19	100
일반인	(801)	55	28	17	100
연령					
19-29세	(175)	44	34	22	100
30-39세	(173)	47	34	19	100
40-49세	(203)	53	33	14	100
50-59세	(201)	61	22	17	100
60세이상	(248)	62	23	15	100

주) 학부모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이며, 일반인은 미혼 또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응답자임(이하 동일)

**학교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인식이
가장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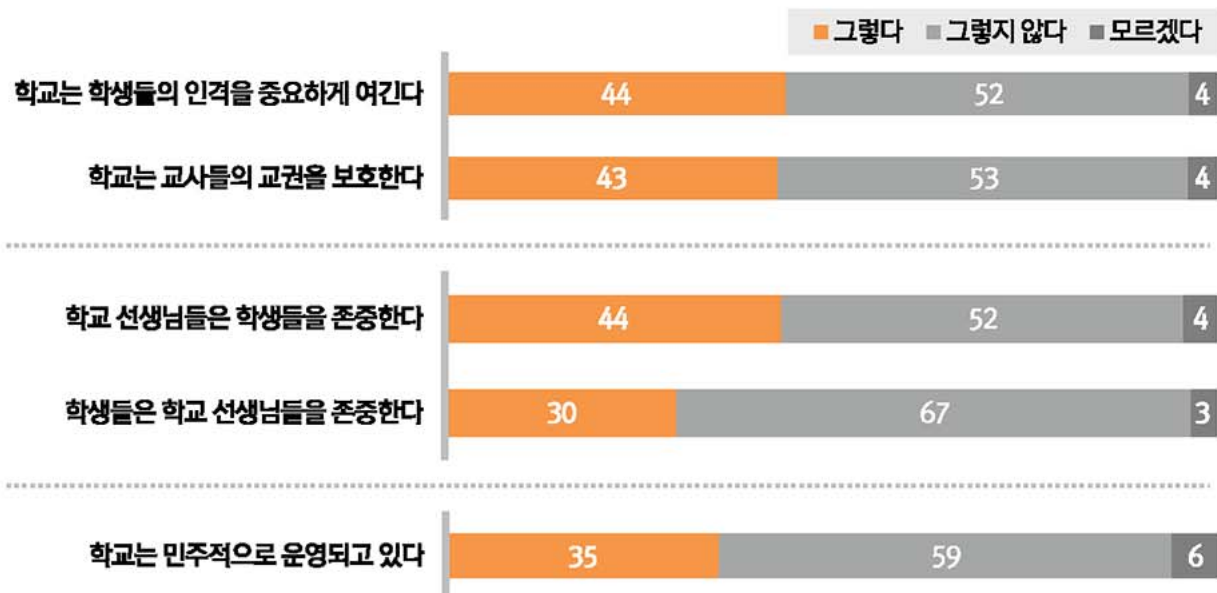
학교가 학생들의 인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44%,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43%로 학교가 학생 및 학교 선생님들의 인격과 교권을 보호한다는 응답은 50%에 못 미쳤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 44%,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한다 30%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간 존중한다는 응답도 50% 미만이다. 특히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67%)이 존중한다는 응답(30%)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3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9%로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Q 귀하께서는 학교현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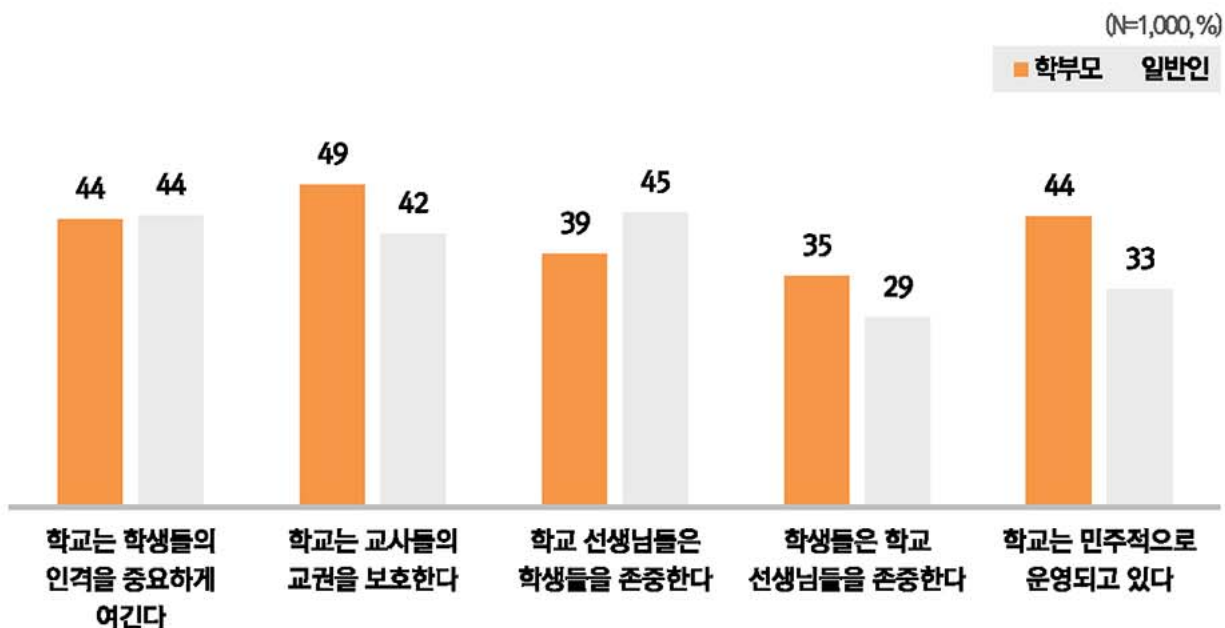
**학부모들은
학교가 교권 보호 및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있는 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해**

“학교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한다”는 응답은 학부모 49%, 일반인 42%로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도 학부모 44%, 일반인 33%로 학부모가 더 높다.

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학부모 39%, 일반인 45%로 학부모가 더 낮다.

일반인에 비해 학부모는 학교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Q (학부모-일반인 비교) 귀하께서는 학교현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가장 시급한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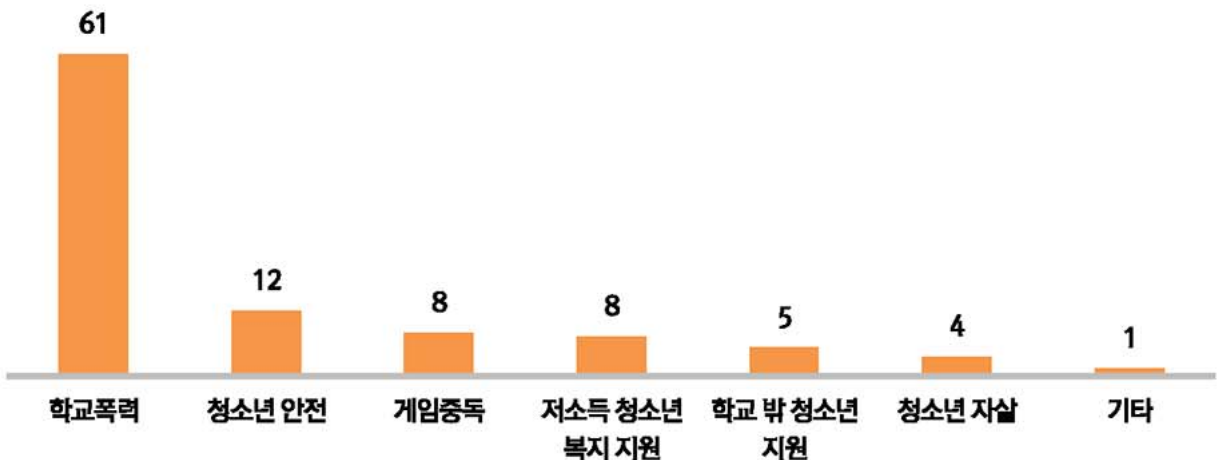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청소년 안전(12%), 게임중독(8%), 저소득 청소년 복지지원(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응답은 학부모와 일반인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학부모의 11%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꼽아 일반인(4%)에 비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학교폭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높아, 20대는 해당 응답이 72%에 이른다.

Q 귀하께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소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학교폭력	청소년 안전	게임중독	저소득 청소년 복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자살	기타	계
☐ 전체 ☐	(1,000)	61	12	8	8	5	4	1	100
학부모 여부									
학부모	(199)	56	13	9	8	11	2	2	100
일반인	(801)	63	12	8	7	4	4	1	100
연령대									
19-29세	(175)	72	7	2	9	2	7	1	100
30-39세	(173)	62	10	7	10	6	2	2	100
40-49세	(203)	60	15	8	8	5	3	1	100
50-59세	(201)	58	13	11	4	7	3	3	100
60세이상	(248)	56	15	12	7	6	3	1	100

교육감 선출은 현재와 같이 직선제로 뽑아야

시도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해 현재와 같이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25%)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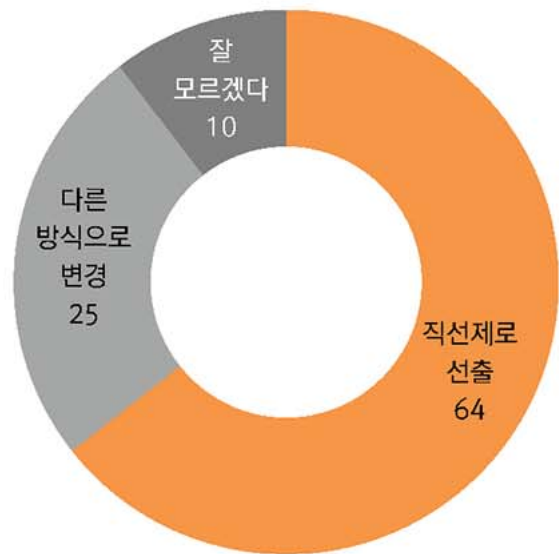
20대, 광주전라 거주자, 진보에서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 높으나, 60대에서는 낮아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일수록 직선제 선출 찬성응답이 높아 해당응답이 60세 이상은 46%에 그친 반면, 29세 이하는 80%에 이르러 대조를 이룬다.

또한, 직선제 선출 응답은 거주지역별로는 광주/전라(77%)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79%)에서 높다.

Q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직선제로 선출	다른 방식으로 변경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61	12	8	8
학부모 여부					
학부모	(199)	69	18	13	100
일반인	(801)	63	27	10	100
연령대					
19-29세	(175)	80	10	10	100
30-39세	(173)	72	16	12	100
40-49세	(203)	70	20	10	100
50-59세	(201)	61	29	11	100
60세이상	(248)	46	44	10	100

Base=전체	사례수 (명)	직선제로 선출	다른 방식으로 변경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61	12	8	8
거주지역					
서울	(195)	61	28	11	100
인천/경기	(300)	66	24	10	100
대전/세종/충청	(105)	62	29	8	100
광주/전라	(102)	77	14	10	100
대구/경북	(102)	64	29	7	100
부산/울산/경남	(155)	61	26	13	100
강원/제주	(41)	56	26	18	100
이념성향					
진보	(321)	79	16	5	100
중도	(340)	64	22	14	100
보수	(294)	51	41	8	100
모르겠다	(45)	51	9	40	100

**교육감을 뽑을 때 학생
인성교육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나,
20대에서는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 해결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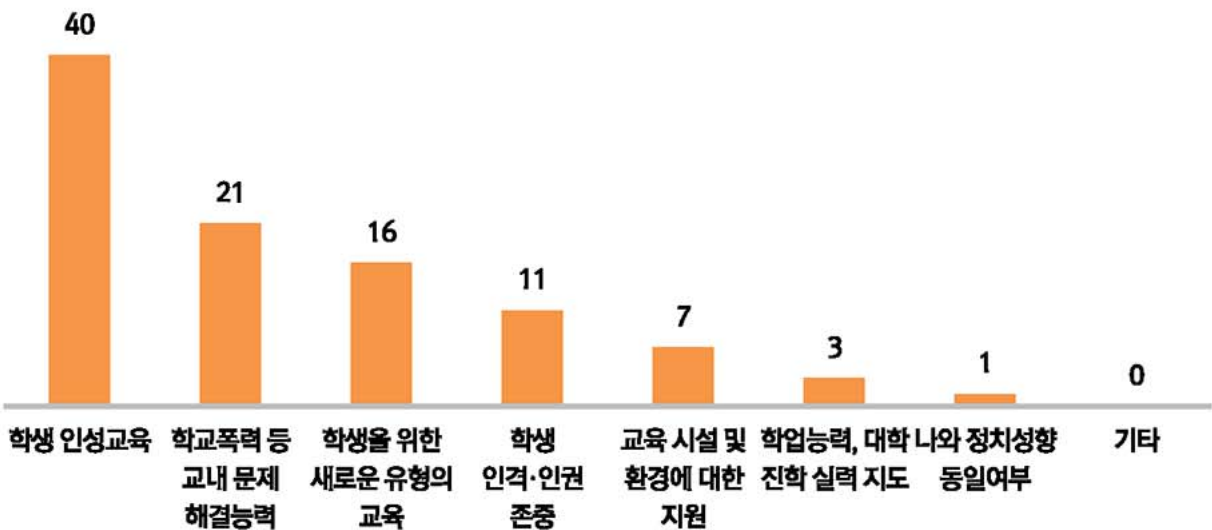
교육감을 뽑을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 학생 인성교육이 40%를 차지해 가장 높고,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 해결능력이 21%, 학생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이 16%, 학생 인격·인권 존중이 11%이다.

관련 응답은 학부모와 일반인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 해결능력이 34%로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학생 인성 교육이 가장 높아서 차이가 있다.

Q 귀하께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소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사례수	학생 인성 교육	학교폭력 등 교내 문제 해결능력	학생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	학생 인격·인권 존중	교육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지원	학업능력, 대학 진학 실력 지도	나와 정치성향 동일여부	기타	합계
전체	(1,000)	40	21	16	11	7	3	1	0	100
학부모 여부										
학부모	(199)	40	18	17	13	6	3	1	0	100
일반인	(801)	40	22	16	10	7	3	1	0	100
연령대										
19-29세	(175)	27	34	12	14	8	4	2	0	100
30-39세	(173)	39	24	13	9	8	5	1	1	100
40-49세	(203)	42	18	17	13	5	3	1	1	100
50-59세	(201)	42	16	21	12	6	3	0	0	100
60세 이상	(248)	47	16	18	7	7	2	2	0	100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드시)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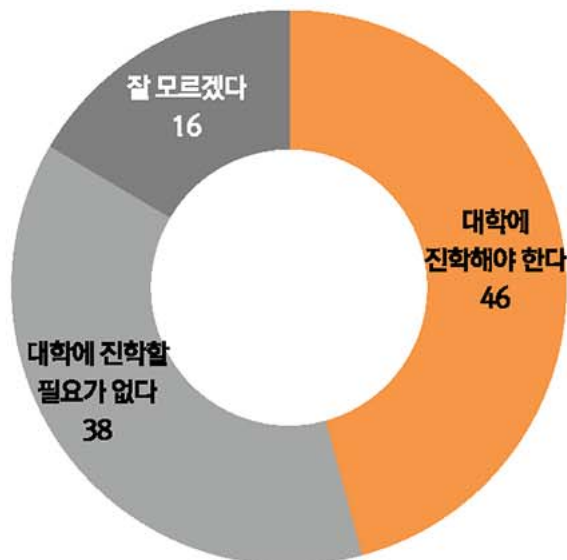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46%, 진학할 필요가 없다 38%로 진학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지만, 해당 응답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이 주목된다.

학부모와 일반인 간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에서는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50%를 넘는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인다.

학력별로는 대재이상이 고학력층이 고졸이하 저학력층보다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Q 귀하께서는 대학 진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6	38	16	100
학부모 여부					
학부모	(199)	44	38	18	100
일반인	(801)	46	38	16	100
연령대					
19-29세	(175)	38 ↓	38	24	100
30-39세	(173)	39 ↓	42	19	100
40-49세	(203)	43	39	18	100
50-59세	(201)	54	32	13	100
60세이상	(248)	52	38	10	100
학력					
고졸이하	(527)	42	42	17	100
대재이상	(473)	50	33	16	100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9%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25%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3%포인트(66% → 69%) 상승하여, 지난 2개월 동안의 10%포인트 하락세에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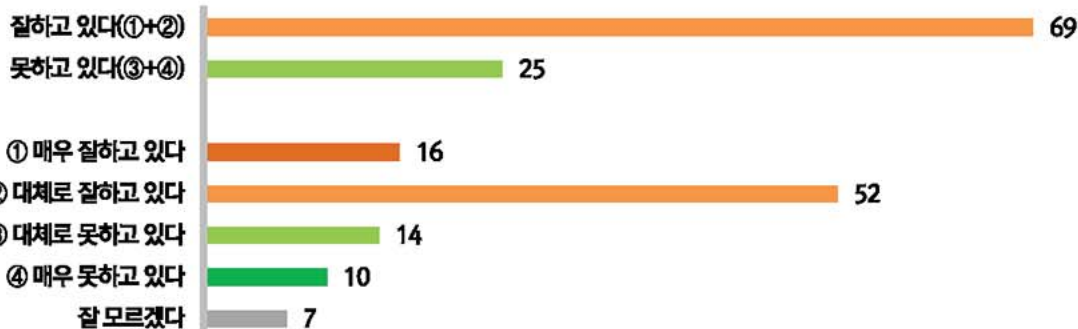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74%, 30대 81%, 40대 77%, 50대 71%, 60세 이상 47%이며, 20대에서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인천/경기 71%, 대전/세종/충청 66%, 광주/전라 85%, 대구/경북 62%, 부산/울산/경남 59%이며, 서울에서 8%포인트 상승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88%, 중도 73%, 보수 47%이며, 지난달 대비 보수에서 6%포인트 상승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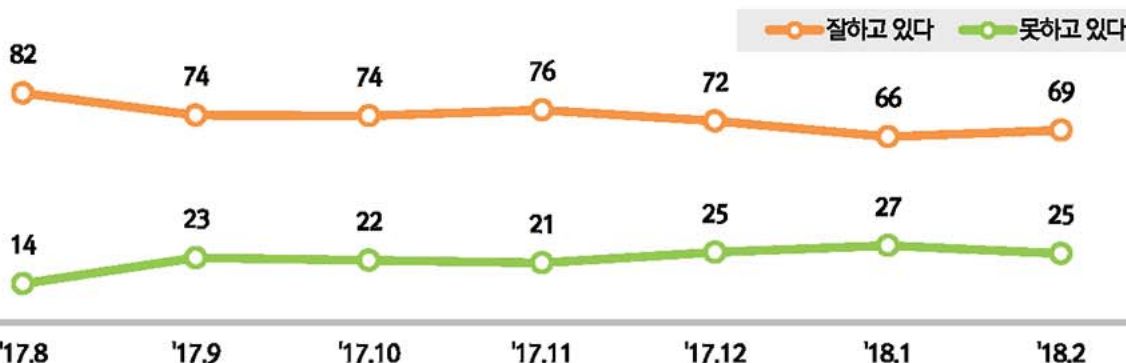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69%, 못하고 있다 25%

(N=1,000, %)



지난달 대비 3%포인트 상승,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 이어오다 소폭 반등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20대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3
19-29세	88	86	83	87	85	67	74	+7
30-39세	90	89	85	86	92	77	81	+4
40-49세	90	85	82	89	75	78	77	-1
50-59세	78	64	71	70	69	66	71	+5
60세 이상	68	54	54	54	47	48	47	-1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3
서울	80	73	69	77	68	60	68	+8
인천/경기	84	76	78	77	74	68	71	+3
대전/세종/충청	82	77	71	73	81	72	66	-6
광주/전라	91	91	82	86	93	84	85	+1
대구/경북	72	61	62	65	57	60	62	+2
부산/울산/경남	82	70	75	76	64	62	59	-3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3
진보	95	93	92	92	89	88	88	-
중도	81	77	75	79	75	70	73	+3
보수	65	50	50	52	51	41	47	+6

02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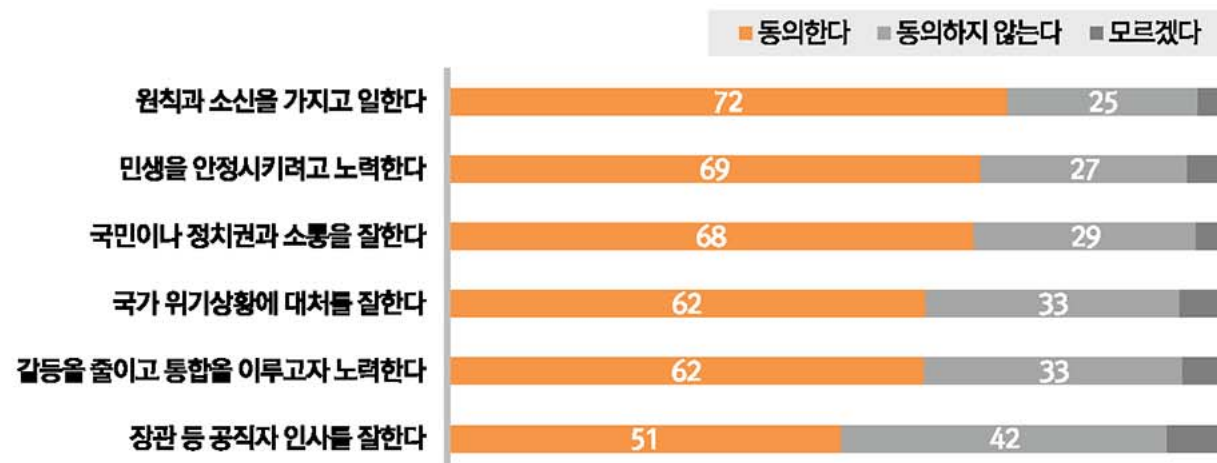
**국가 위기상황
대처 항목에서 상승하고,
민생안정 노력 항목은 하락**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 평가가 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생 안정(69%), 소통(68%), 위기상황대처(62%), 통합노력(62%), 공직인사(51%) 순이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국가 위기상황 대처 항목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민생안정 노력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4%포인트 하락하였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국가 위기상황 대처 항목만 상승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전월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81	76	77	77	75	72	72	-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84	79	76	78	75	73	69	-4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81	72	75	72	72	69	68	-1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68	58	59	72	66	59	62	+3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75	69	68	67	65	62	62	-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8	50	49	54	51	52	51	-1

02

국정지표
3. 국가 경제 인식국가경제 인식지수
-26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26으로 지난달(-23) 대비 3포인트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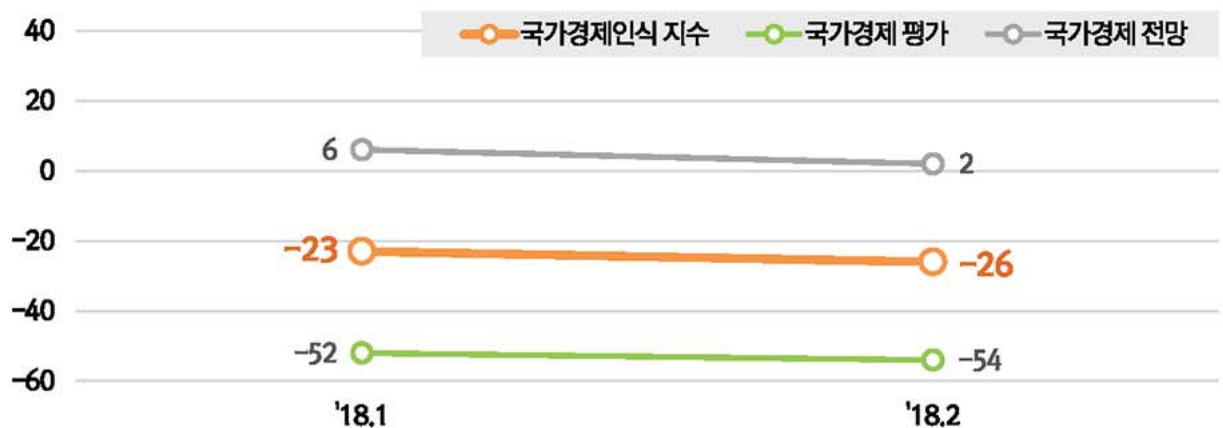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7%	31%	61%	1%	100%	-54(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것- 나빠질것 (c-d)
	32%	36%	30%	2%	100%	2(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6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3포인트 하락

(N=1,000, %)



02

국정지표 4. 국가 안보 인식

국가안보 인식지수 -4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4으로 지난달(-14) 대비 10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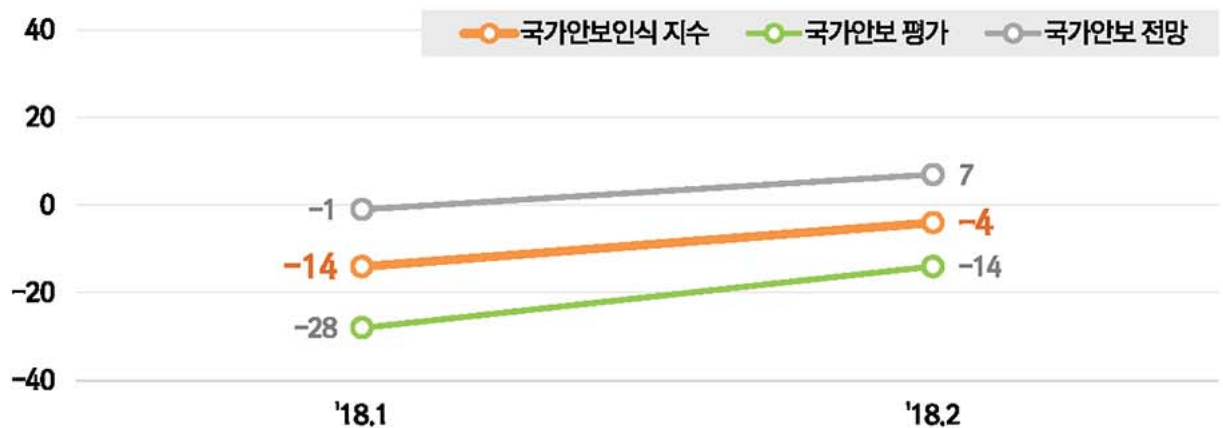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25%	33%	39%	3%	100%	-14(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33%	37%	26%	4%	100%	+7(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4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0포인트 상승

(N=1,000, %)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7년 12월 기준 4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7년 9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7,673명, 조사참여 1,713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3.0%, 참여자 대비 58.4%, 유효참여율 대비 71.2%)
조사일시	• 2018년 2월 23일~2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